

#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

2021. 7.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7월 21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승 현 위 원

위 성 백 위 원

\* 의결 제241호~제277호, 보고 제27호~제33호 참여

김 근 익 위 원 대행

####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1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4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4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40호 『예금보험공사 2021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41호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제242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 및 증선위 회의의 의결서 작성 및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 권한사항 중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 (위원) 내부규정인데, 법적인 측면에서 이상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 (참여자) 의사운영정보팀과 사전에 같이 검토해보았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3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의 청렴 및 감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공직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권유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 (위원) 연 3%의 경우 연 2.25%로 인하키로 했는데 규개위에서 75bp 인하로 바뀌어서 온 것인지?

○ (보고자) 입법예고 할 때는 당초에 1%p 인하로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있어서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75bp 인하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융위 의결할 때는 75bp 조정된 것으로 올린 것임.

○ (위원)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7월7일 시행했는데 신규실적을 보니, 대부업권은 최고금리가 20%인데 평균금리 20%라는 얘기는 모든 대출이 20% 나왔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그러함. 대부업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등 없이 다 20%로 대출하고 있음. 대형대부업체는 거의 저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대상이 대형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인데 이 경우는 거의 차등 없이 20%로 나가고 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5월31일 발표한 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세금반환보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 (위원) 전세금 보증한도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  
수요자 지원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안인데 이런 제도를 악  
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집주인, 전세금  
설정자들이 이렇게 보증한도가 높아졌음을 기회로 해서 전  
세금을 올릴 소지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전세시장에서 전체 전세금이 상승할 폐해는  
없는지?

○ (보고자) 일반적으로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면 전세가나 집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  
을 수 있음. 일단, 개정안을 통해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전세  
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세입자가 보험차원에서 가입하는 이행성 상품이고  
이 자체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은 아니어서 차이가 있음.  
다만, 이 상품 한도 확대 자체보다는 같이 추진하는 전세대  
출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되  
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음. 다만, 5월에 저희가 실수요자 지원 방안에서 보증  
한도를 확대한 것은 지금 서울지역 전세가 평균가격이 이미

6억 원이 넘어서 많이 올라갔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도 전세가가 올라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실수요에 대한 정책상품의 보증대상을 조정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전세보증금 한도가 확대되어도 자금지원이 나가는 대출, 보증한도는 2억 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금이 들어가서 가격 상승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과관계 분석이 되는데, 전세금이 올라서 전세지원이 확대되는 것인지 전세지원이 확대되어서 전세금이 올라가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혹시 주택금융공사에 연구소 같은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주택금융연구원이 같이 부설로 있음.
-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어차피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지적은 나오고 있기 때문임.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246호 『(주)테라크라우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47호 『(주)론포인트소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48호 『(주)프로핏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49호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 가계금융과장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주)테라클라우드대부 등 3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관경고에 해당함을 결정하는 한편, (주)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통보를 처분하는 내용
- (위원) 기존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했는데 이번 P2P업체는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과정 중에 영업정지가 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결국 폐업하게 되고, 그래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감사원과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아까 세부양정기준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대부업자 같은 경우 시·도 등록과 금융위 등록이 구분되어 있는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감경할 수 있음. 그래서 P2P연계 대부업자 같은 경우에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3년간 등록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경고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살펴봤음. 그런데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음에도 그동안 제제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미성 판단은 총자



산한도 할 때 했던 10%기준으로, 그리고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본 것은 자진시정 노력을 통상은 검사착수하기 전까지 한 것만을 자진시정 한 것으로 봐줬는데 어쨌든 온투업으로 산업전환기인 것을 감안해서 8월26일 전까지 검사를 한 업체와 안 한 업체 간에도 형평성을 고려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고려해서 8월26일 금융위 소위 전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었음. 그 부분은 감사원에도 산업전환기 특성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해서 그런 필요성을 인정받았음.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금감원에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지난 5~6월에 걸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했음.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위 사무처 수정안에 동의하고 있음.
- 제246호~제248호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고, 제249호는 원안대로 의결함

⇒ 제246호~제248호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하고, 제249호는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0호 『(주)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51호 『(주)오마이갯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52호 『(주)노블클라우드대부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53호 『솔루션핀테크대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 등 4개 대부업자가 고정사업장 미비, 소재지 불명,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무실적 등 등록취소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처분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4호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확인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기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5호 『(주)대구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6호 『(주)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7호 『(주)부산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58호 『토스인슈어런츠(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9호 『DB손해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60호 『NH농협생명(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61호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62호 『(주)시루정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63호 『(주)페이콕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64호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65호 『(주) 신한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66호 『(주)직뱅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267호 『(주)스몰티켓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68호 『신한카드(주) 및 신한금융투자(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6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금융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험적으로 Play ground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놀아봐라 하는 취지가 규제샌드박스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다른 안건들과 다르게 제264호 안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Factoring)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상환청구권 없는 그 정도가 부과된 것 같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기존에 이해하던 규제샌드박스와의 약간 궤(軌)를 달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안건을 설명하신 것을 보면 범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이라고 해서 이 배경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함.

- (보고자) 기술보증기금의 팩토링(Factoring) 업무에 대한 혁신성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며, 논의에 대한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음. 혁신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 영국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권에서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Factoring)이 굉장히 드물다고 함. 따라서 이것은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데 혁신성이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인정된다고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작년 4월에 신용보증기금이 지정이 되었는데 신보와 달리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업무범위가 다른 것임.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는 것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혁신성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위원회와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에는 인정을 하되 추후 법령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음.
-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2020년 4월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도 역시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그렇게 업무가 허용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2020년 4월에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업무를 허용해 주어서 올해 1월에 사업을 출시하였음. 그리고 참고로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팩토링(Factoring) 업무를 부여하는 의원입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 (위원) 팩토링(Factoring)을 한다는 것은 판매기업이나 구매 기업에 다 좋은 형태인데 구상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담이 재정이다 보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진척이 안 되었던 부분을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수혜를 주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구상권 없는 부분을 법을 고쳐야 되는데 아까 보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법 시행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정부정책의 목적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이 먼저 한 것임. 이 과정에서 기술기업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겠다고 해서 기술보증기금도 신청을 한 것임. 궁극적으로는 법을 고쳐서 이런 샌드박스가 아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군가 재정을 수반해야 하므로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같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한 140~15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하면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음. 금융위 차원에서 업계와 이야기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진짜 혁신이고 진짜 참신한 것을 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해야겠고, 한편으로 이미 나와 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많이 나온다는 생각도 들음. 그래서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누구나 다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런 차원에서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림.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9호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0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첫 번째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함.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의 보험금이나 환급금, 기타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금액 아닌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이 법률의 취지가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할 경우, 그렇게 해서 추후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소적립에 대한 조항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만일 과다하게 계상해서 적립했을 경우에는 어떤 폐해가 있는 것이고, 보험업법 제120조가 이러한 경우도 규제하라는 것인지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거에 책임준비금을 과다적립해서 혹시 제재가 나갔던 전례

가 있는지를 여쭙어보고 싶음. 마지막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되어서 제120조의2가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항으로, 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과소적립을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그래서 제120조나 제120조의2는 결국 과소적립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제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위원님 말씀대로 법상 과소나 과대 둘 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범위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규정 자체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들어온 지 한 20년 되었음. 처음에는 벌칙조항으로 있다가 지금은 1단계 내려서 과태료로 조치하고 있는 것임. 책임준비금 과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정확하게 잡도록 하는 행위규제의 측면도 있을 것 같음. 그리고 불필요하게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기 보다는 자산운용을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투자자나 주주의 이익으로 환원하든지, 또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 같음. 반면 악용하는 사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책임준비금이 비용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세금 이연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이 규정이 법의 형태로 들어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듦.
- (보고자) 과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고 금액이 조금 미미해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한 사례는 2건 있음.

-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 미미해야 ‘주의’이고, 어느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음.
- (보고자) 이 과태료 조항이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아까 보고드린 조치사례는 과태료 조항이 아닌 벌칙 조항으로 있을 때 사례로써, 위반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발조치로 형사처벌을 할 사항은 아니어서 단순 주의 조치한 바 있음.
- (위원) 형사처벌할 수 없어서 ‘주의’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내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미미’의 의미가 예컨대 지금 1,500만 원에서 9억 4,1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진짜 1,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정도로 엄격히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금감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음.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쌓을 때 많이 쌓는 것을 장려해야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쌓으면 그것도 또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이 많이 날 때 세금을 그렇게 할까봐, 아마 은행들도 충당금 쌓을 때 금감원 기준에 맞추어서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비슷한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적게 쌓았을 때 벌칙을 과하게 하는데 과하게 쌓았을 때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을 과하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보고자)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원) 우리가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지, '과다'라는 개념을 법 취지에 맞추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1호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엠지손해보험(주)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오늘 안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저금리가 계속 되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서 보험업계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음. 손보업계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엠지손해보험(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손보업계, 특히 일부 중소형 손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손보업계 전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전망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고 대비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엠지손해보험(주)과 관련해서 보면 엠지손해보험(주)이 적기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바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걱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래서 엠지손해보험(주)가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엠지손해보험(주) 같은 경우 경영실태평가가 4등급이지만 지급여력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임. 그래서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 되면 사실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임. 그래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경영개선계획을 엠지손해보험(주)이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금융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음.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서 다시 경영개선계획 안건 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 엠지손해보험(주)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이번에 경영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과정임. 동사의 RBC비율을 보면 2020년에 급격히 낮아졌는데(170%→103.5%)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 때문인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엠지손해보험(주)은 기본적으로 보험손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음. 판매했었던 별로 좋지 않은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경영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체투자에서 손실도 발생해서 안 좋은 상황임.
- (위원)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한 것이 2년 전이고 이번에 다시 경영개선 요구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경영개선명령의 실효성 부분도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것임. 저희가 명령을 내리고 2년 뒤에, 물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시다만, 특히, 비계량 부분의 경우, 저희가 승인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감독을 잘 해왔다면 더 좋아졌어야 되는 것 같은 데 엠지손해보험(주)은 변화가 있는 것인지는?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계량 부분은 회사들이 해야 할 상황임.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경영은 경영진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약적인 부분은 감시자로서 보지만 결국은 경영진의 근본적인 인식과 그것에 대한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 거기에 따라서 감시할 부분은 주주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감독당국도 인식을 같이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됨.
-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저희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승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에 따라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음.
- (보고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 그래서 이번에 제출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 (위원) 지금 경영개선명령은 부과를 했고 그러면 명령은 줄

업한 것인지? 보통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면 경영개선계획을 받음. 계획에 보면 보통 방금 말씀하신 고질적인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음. 그러면 경영개선계획에도 다 있을 텐데, 결국 우리가 승인을 하고 이행을 계속 감독해 왔을 것임. 그런데 갑자기 또 요구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명령은 졸업을 하고 요구를 새로 하는 것인지?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위원) RBC 비율은 지급여력비율 요구사항이 아닌건지?
- (보고자) RBC 비율은 요구사항이 아님.
-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비계량으로 해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지난번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해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경영개선명령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자본 확충은 대부분 다 완료한 상황임. 이번에 하는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은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취약해서 내리는 적기시정조치임. 적기시정조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지급여력비율, 재무건전성이 나뉘었을 때 적기시정조치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영실태평가, 보험회사는 RAAS라고 하는데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해서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가 있음. 이번에는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해서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라서 구별됨.
-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그

것이 경영진의 경영정책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경영정책사항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경영개선요구가 나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경영개선계획을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지, 방향성만 가지고 경영개선요구다, 경영개선명령이다, 경영개선권고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에 경영개선요구를 통해서 개선계획을 받으실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실제로 그 계획이 이행이 됐을 때는 이 회사가 정상경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됨. 계속 방향만 주고 방향만 갖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봄. 우리가 회사에 적기시정조치 부과하는 자체가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 아닌지?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부과가 됐으면 좋겠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금융사로 경영개선계획을 받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경영실태평가 결과 엠지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보험리스크가 굉장히 취약함. 그리고 수익성도 안 좋고 금리도 리스크가 안 좋고, 각각 리스크를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들을 징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다시 보고토록 하겠음.
- (위원)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엠지손해보험(주)이 여러 번 오

르내리고 연기하고 해서 이번에는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라오니깐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적기시정조치만 부과하고 경영진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일 좋기로는 더 이상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경영이 크게 개선되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2호 『(주)전북은행 등 5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전북은행 등 5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3호 『중소기업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중소기업은행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4호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5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심사기준 등이 시행령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타 감독규정상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 (위원)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 날 바로 금융위에 안건을 상  
정하는 것인지?

○ (보고자) 7월27일에 시행으로 그 일정에 맞춘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6호 『(주)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비금융지주의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7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제재안건 관련 안건검토소위원회 때 많은 논의가 있었음. 자회사는 공동점포에서 「공동점포 이용」 관련공시를 하였으나,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경영공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제재처분은 침익적 처분인 만큼 엄격한 법적근거가 요구되는데 안건검토소위원회는 동 사항이 경영공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법적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또 다른 지주회사 사례를 보면 1개 지주회사를 제외한 여타 금융지주회사들도 모두 동 사항을 경영공시 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봤음. 이에 따라 검사및제재규정 별표3 과태료 면제사유 제7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면제할 것을 건의 드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다만, 공동점포 사항 미공시가 위반행위 자체에는 해당되는 만큼, 동일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시정조치로 갈음하고 정정공시토록 하는 조치를 건의드리고자 함.

○ (위원) 비교적 소액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는 것은 제재조치에 대한 위임근거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지?



- (위원) 그러함. 법적인 위임근거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서 과태료 제재안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상황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多寡)의 문제가 아니고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과태료 면제를 하고 다른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위원) 그렇다면 뒤의 안전인 ○○금융지주도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인지?
- (위원) ○○금융지주는 별개의 건이고, 지금 제재심에 대기 중인 안전으로 △△금융지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음.
- (위원)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고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음.
- (위원) KB금융지주의 “공동점포 이용사항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 2,400만원 부과를 면제하고, KB금융지주의 “자회사 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하는 수정안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수정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함. 그런데 과태료를 면

제하는 경우 금융위에서 면제사유를 정확하게 지정해주셔야 금감원에서 깔끔하게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혹시 제7호 외 위법성 착오 부분에 의한 조항은 따로 적용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정해 주시면 나중에 금감원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더 명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면제 사유를 제7호만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 말씀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과태료 면제를 할지 아니면 제7호로 할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을 고려해 봤었는데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검토할 때는 제7호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 함

- 의결안건 제277호 『(주)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신한금융지주의 “금융지주회사 등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4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신한금융지주의 경영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의견진술 하도록 하겠음. 먼저 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먼저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임. 경영공시의 세부기준과 범위는 ‘금융지주회사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당사가 그 제·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음. 당사는 동 작성지침에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공시자료 작성 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 그리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는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를 통해 충분히 공시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지적 또는 투자자 민원을 제기 받은 적도 없었음. 즉, 당사는 작성지침에 따라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및 자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는 지주회사 공시 대상으로,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는 자회사 공시 대상으로 판단하였음. 다음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간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임.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 해당 내용이 공시되어 있었음. 그리고 기 공시한 대출거래와 별개의 거래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이자수익을 인식한 것이 대부분임. 또한 당사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하였음.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등이 받은 기관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임. 작성지침 상 ‘자회사’등의 표현이 없음에 따라, 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주사의 주주총회 부의 내용 및 주주총

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내용만을 확인하여 ‘자회사’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음. 그런데 2017년도 당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졌음.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경영공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경영공시의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그 누락된 내용이 중요내용에 해당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 본건의 경우 경영공시 과정에서 경미한 일부내용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다른 공시에 의해 해당 내용이 충분히 공시된 측면을 고려하면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음.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음. 금융당국에서는 본건 조치원인사실에 대하여 위반결과를 ‘경미’, 위반동기를 ‘중’으로 법정최고금액의 40%를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예정을 통보하였음. 위반행위가 위반동기 ‘중’에 해당하려면 위반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어야 함. 그런데 본건 조치원인사실은 지침에 근거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식해온 기존의 경영공시방법을 지속한 것일 뿐이며, 의도적으로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님. 미공시 내역은 당사 또는 자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시되었음. 위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공시된 내용을 지주사 경영공시에서 중복하여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현저히 주의의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당사는 작지침의

제정 및 개정 시 적극 참여하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여 공시하여 왔음에도 미공시가 발생한 것으로 당사가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조치원인사실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동기 ‘하’에 해당하여 법정최고금액의 20%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시어 과태료 부과조치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 이어서 회사 측에서 잠시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 (진술인) (주)신한금융지주 회계팀 이상중 부장임. 당사 경영공시 내부거래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회계팀에서 작성을 해서 위반동기와 관련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음. 당사의 연결대상회사가 한 400여개 회사가 되는데 그중에서 은행 및 자회사, 은행현지법인에 해당하는 손자회사들, 카드 및 자회사, 카드의 손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체 내부거래를 전부 다 취합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자회사와 은행 간의 거래는 이미 한 번 제거가 되어서 올라오고 카드는 카드 나름대로 카드 연결 단위에서 한 번 제거가 되어서 올라옴. 그래서 지주회계팀에서 관리하는 내부거래는 카드그룹, 은행그룹 이런 식으로 자회사 그룹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 그래서 당사 회계팀에서 판단하기에는 지주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거래, 그러니까 자회사 그룹등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경영공시에 포함해서 공시를 했었고, 해당 자회사 및 그 손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등 내 내부거래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공시에 포함해서 공시를 했음. 이러한 경위에서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공시의 취지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부거래는 경영실적을 산정하거나 재무상태를 산정할 때 이미 제거가 되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나 경영공시 영향을 주는 왜곡 표시가 전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고의로 내부거래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하려는 동기는 없었고 단순히 작성기준에 대한 판단착오에서 기인된 사실 일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위원) 회사 측에 질문 드리겠음. 지주회사법에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제56조인데, 그 조항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빼고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시했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조항 본문에 '자회사등'이라고 되어 있음.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당연히 '자회사등'에 대한 정의를 봐야 될 것이고, 금융지주법상 정의 조항에서 '자회사 등'에는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기다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법에 의해 너무나도 명확히 규정된 것인데도, 작성지침에서 '자회사 등'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생각이 듭. 이에 대해 다르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 (진술인) 지주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 A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와 자회사 B에 대한 연결재무제표가 각각 있으며, 자회사 A, B 각각 하나의 연결집단을 이루게 됨. 당사가 판단하기에는, 해당 연결집단 내에서의 거래는 자회사등, 은행등 내의 내부거래이고 은행등 연결그룹과 카드 연결그룹 간의

거래는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라고 판단했었음. 당사는 이렇게 판단하여, 자회사등 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자회사에서 공시를 했고,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부분은 지주회사 경영공시에 포함해서 공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해석에 있어서 당사에서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들이 언급했던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위반동기를 '하'로 했는데 왜 (주)신한금융지주는 '중'으로 산정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보고자) △△금융지주의 위반내용하고 (주)신한금융지주의 위반내용은 서로 다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신한금융지주는 '등'에 대한 해석이 법규에 있음에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경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금융지주 같은 경우 상품권 공시가 누락된 것인데, 이를 일부 경과실로 본 측면이 있어서 내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27호 『금융지주회사법상 공동출자법인 관련 해석

기준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지주회사법」상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판단요건 등 해석기준과 향후 운영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내용

- (위원) 개선방안에 대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겠는지?
-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금융위 실무부서에서 면밀한 조사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것으로 파악이 됨.
- (위원) 앞으로 시행령과 관련규정을 잘 정비해주시고, 정비 전이라도 적용대상 회사들에게도 알려주어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주기를 바람.
- (보고자) 그렇게 조치하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8호 『금감원 표준검사처리기간 경과 검사건 등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처리하는 기간이 표준처리기간을 경과한 건에 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9호 『(주)○○○○○ 등 ◆개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 등 ◆개 회사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0호 『키움증권(주)의 마스틴제110호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키움증권(주)이 인수과정에서 취득한 마스틴제110호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출자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1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2호 『'20.10월~'21.3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3호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4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22분 폐회)